www.nafi.re.kr

2019
국회미래연구원
연차보고서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2019 국회미래연구원 연차보고서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발간사

2019년 국회미래연구원 연차보고서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저희는 2018년 5월 설립 이후 먼저 미래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연구부터 시작하였습니다. 2019년은 그 연구의 정책 함의를 도출하는 한편 향후 국회미래연구원이 차별화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연구과제를 발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2050 종합미래시나리오와 국민선호조사, 국가장기발전전략, 국제전략 연구를 통해 예측, 선호, 정책으로 연계되는 미래 연구의 틀을 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2018년의 분야별 예측 연구를 바탕으로 2050년의 종합 시나리오를 연구하였고 국민이 살고 싶은 미래의 모습을 직접 국민에게 물어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국가장기발전전략연구를 통해서는 미래 대비 국가 시스템의 변화 방향을 살펴보고, 거버넌스, 삶의 질, 혁신성장, 노동 분야의 구체적 개혁 의제를 분석하였습니다. 국제전략에서는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안보, 경제, 문화분야의 전략을 도출하였습니다.

새로운 준비도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행복 연구를 통해 개발된 측정 도구와 조사 결과는 국민의 행복 수준을 제고하는 정책에 크게 참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연구는 정부가 미래 대비 계획을 수립하면서 연계성과 일관성을 기하는 데에 활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당 연구원과의 공동 연구의 틀을 만들고 국회 신뢰도 방안 제고를 함께 연구할 수 있었던 것도 새롭고 의미 있는 도전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내기 위해 진력을 다한 미래연 연구진께 감사와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공동연구에 참여해 주신 외부 연구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새로운 미래를 여는 국민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 연구성과를 다양한 형태로 국민에게 전달하고 미래의 방향 제시에 노력하겠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의 2019년 연구성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nafi.re.kr)에서 개별 보고서를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국회미래연구원장 **박 진(朴進)**

CONTENTS

01. 기관개요 · · · · · 6

02. 2019년 연구보고서 · · · · · 8

• 2050 종합미래시나리오 예측 연구사업 · · · · · 8
- 2050 종합미래시나리오 예측연구 · · · · · 9

• 국민선호조사 연구사업 · · · · · 10
– 한국인 선호미래 조사 연구 · · · · · 11
– 청소년 미래선호가치 설문 조사 기반 연구 · · · · · 12
– 20대의 정책미래선호에 관한 질적 연구 · · · · · 13
: 노동이민정책·가족정책·외교안보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인의 행복 연구 · · · · · 14
– 「한국인의 행복 측정」 기반 연구 · · · · · 15

• 국가장기발전전략 연구사업 · · · · · 16
– 국가장기발전전략 연구 총론 : 새로운 발전전략의 모색 · · · · · 17
– 국가장기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개혁 의제 연구 · · · · · 18
–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개혁 의제 연구 · · · · · 20
: 복지, 주거, 보건 부문을 중심으로
– 혁신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개혁 의제 연구 · · · · · 21
– 노동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개혁 의제 연구 · · · · · 22
– 주요국 중장기 미래전략연구 분석 · · · · · 23

• 국제전략 연구사업 · · · · · 24
– 국제전략 연구 : 안보·경제·문화전략을 중심으로 · · · · · 25

• 미래영향평가 연구사업 28
– 국가장기전략 추진을 위한 국회의 기능 개편 방안 연구 29
–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실시 방안 연구 30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예비연구 31
– 정주여건분야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예비연구 32
– 사회정책분야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예비연구 33

• 국회정책역량강화 연구사업 34
– 국회 신뢰 제고 방안 연구 35

• 자체연구역량강화 사업 36
– 국회미래연구원 2050년 미래연구 과정 고찰 37
– 미래의 급격한 기술 발전과 공공서비스 패러다임 변화 38
– 미래 대한민국의 저출산과 일자리에 숨겨진 피드백 루프와 시나리오 40

03. 연구 외 활동 42
• 단행본 42
• 주요행사 44
• 미래 세미나(금요 브라운백) 개최 46
• 미래 좌담회 개최 49
• 기고문 50
• 미래엽서 53
• 미래에서 보내는 편지 53

04. 연구과제 목록 54
• 2018년 연구과제 목록 54
• 2020년 연구과제 목록 55

기관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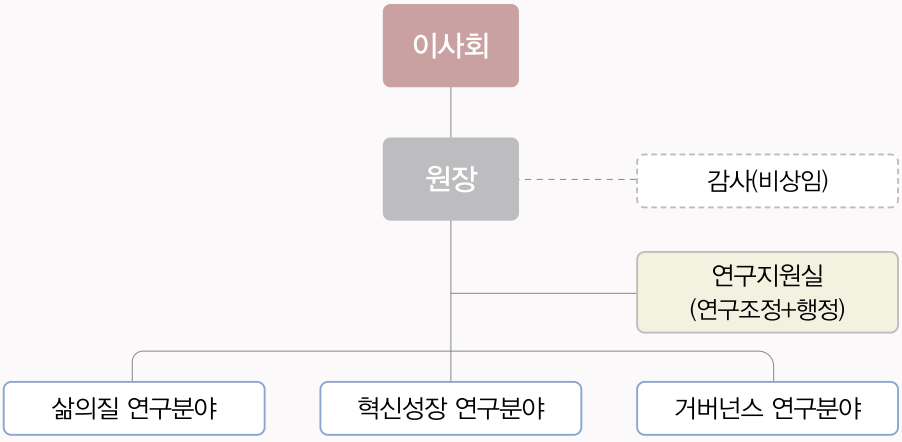
• 설립목적

–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 · 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국회미래연구원법 제1조(목적))

• 사업부문

– 다음 각 분야에 대한 미래 환경 예측 · 분석 및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도출
  • 통일·외교·국방 및 국제전략 • 국가의 신성장동력 • 지속가능한 발전
  • 국민 삶의 질 향상 • 그 밖에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가 필요한 분야
– 국내외 대학·연구기관과의 상호 교류·협력

• 조직도



• 인원 현황

(2020. 5월 기준 / 단위:명)

구 분	원장	연구직(박사급)	행정직	계
정규직	1	16	4	21

● 연 혁

개원이전

’17. 03. 13	「국회미래연구원법」안 국회운영위원회 제출
’17. 11. 24	동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
’17. 12. 12	「국회미래연구원법」 공포
’18. 01. 10.	국회미래연구원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위원장: 조동성)
’18. 03. 21.	미래연구원 이사회 구성(이사장: 김선욱)

개원이후

’18. 05. 21.	초대 미래연구원장(朴進 KDI 대학원 교수) 임명
’18. 05. 28.	미래연구원 개원식 개최
’18. 10. 10.	미래연구원 · 의원연구모임 에스토니아 대통령 초청강연회 개최
’19. 05. 24.	미래연구원 개원 1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19. 09. 03.	미래연구원 제1회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19. 09. 20.	미래연구원 · 기획재정부 ‘미래전략 컨퍼런스’ 공동주최
’19. 10. 04.	미래연구원 · 5개 정당정책(연) · 전국시도연(협) 공동포럼 개최
’19. 10. 10.	EPTA(European Parliamentary Technology Assessment) 가입
’20. 05. 26.	미래연구원 개원 2주년 기념식 개최

2050 종합미래시나리오 예측 연구사업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IT, BT 기술과 같은 세부기술 분야 또는 인구추계와 같은 세부 사회분야 등 특정 분야를 넘어서 영역을 도출함으로써 종합 미래예측을 시도하였다. 미래질문 시나리오, 영역별 종합미래시나리오, 종합미래시나리오 등 3층 구조로 미래시나리오를 도출하여 영역별 10개의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상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2050년을 대비하는 지향, 대응, 회피 전략을 제시하였다.

- 2050 종합미래시나리오 예측연구

2050 종합미래시나리오 예측연구

김홍범 외

본 연구는 국내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남북한 관계의 변화, 선진국으로의 안착, 세계질서의 다극화에 따른 국제 전략의 변화 등 다양한 미래 현상에 대한 지향전략, 대응전략, 회피전략의 합리적 마련을 위해 수행되었다. 특히, 2018년 연구결과를 활용한 거시적, 장기적, 통합적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휴먼을 기반으로 거버넌스, 성장과 발전, 의식주, 개인과 공동체 등 5개의 영역을 확정하였다.

상세 연구 절차를 살펴보면, 거버넌스, 성장과 발전, 개인과 공동체, 의식주 및 휴먼의 5개 영역에서 24개의 미래질문을 도출하고, 각각의 미래질문에 대한 대안미래를 탐색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미래연구에서 하나의 미래질문에 대한 답을 탐색하는 것에 비하면, 본 연구는 미래질문의 규모와 종합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그리고 미래시나리오의 구조적 측면에서 다른 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하나의 미래질문에 대해 복수의 대안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이 미래연구의 일반적 모습이나, 본 연구에서는 미래질문 시나리오, 영역별 종합 미래시나리오, 종합 미래시나리오 등 3층 구조로 미래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동인 분석, 시나리오 및 미래정책을 표준화된 정보구성요소로 접근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제도적 속성과 환경변수의 변화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를 기준안(BAU) 시나리오로 상정하여, 최가능 미래로서 확정하였다. 그에 따라, 해당 시나리오에 포함된 주요 환경변수 및 정책(제도) 변수의 변화 추세에 맞춰 적절히 대응해 나가기 위한 정책적 대안들을 대응 정책으로 제시하였다. 쇠퇴 시나리오의 경우는 우리 한국사회가 피해야 할 미래시나리오로서, 해당 미래시나리오에서 제시하는 주요 환경 및 제도 변화의 흐름에 따른 위험과 손실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도출하였다. 지속성장 시나리오에서는 국민들이 선호하는 미래시나리오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변수 및 정책변수 등 동인들의 변화 추세를 선호 미래시나리오 달성을 위한 정책 대안을 지향정책으로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전환적 시나리오의 경우는, 예외적 상황을 고려한 미래시나리오로서, 한국 사회가 의존하고 있는 주요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제도적 요소의 분절성 등이 고려된 미래 환경 변화로 상정하였다.

이러한 시나리오별 BAU와의 갭분석을 통해 영역별 10개씩의 정책의제를 발굴하여 지향, 대응, 회피전략으로 구분하여 불확실성이 가득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으로 제안하였다. 이는 2050년을 대비하여 현재 바로 준비해야 하는 정책들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정책 활용 시, 단계별 선후 관계 확인을 통해 정책의제 도입을 제안하였다.

국민선호조사 연구사업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국민선호조사사업은 국민의 선호미래상, 청소년 미래선호가치, 정책미래, 행복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업은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국민과 함께 바람직한 미래로 나아가면서 행복과 삶의 질을 제고하는 과정을 제시한다.

- 한국인 선호미래 조사 연구
- 청소년 미래선호가치 설문 조사 기반 연구
- 20대의 정책미래선호에 관한 질적 연구
  : 노동이민정책 · 가족정책 · 외교안보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인의 행복 연구
- 「한국인의 행복 측정」 기반 연구

한국인 선호미래 조사 연구

박성원 외

본 연구는 국민과 함께 미래 사회의 다양한 가능성을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이 바라는 미래사회를 선택하는 적절한 방법과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 중장기 전략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가 필요한 이유와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다룬 연구들은 국민의 참여를 매우 소극적으로 허용해 왔다. 대부분 정책가나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사회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한 뒤 국민의 의견을 듣는 식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미래사회의 비전과 전략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국민이 원하는 미래사회의 모습과 실현 방안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다.

연구진은 변화와 안정, 미래지향과 현재지향,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 연대 등 미래사회를 설계할 때 중요하게 고려할 세 가지 가치축을 활용해 급진성장사회, 안정성장사회, 보존분배사회, 현존분배사회 등 4가지의 미래사회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연구진은 이 미래 시나리오를 들고 전국에 거주하는 502명 시민을 서울, 대전, 부산 등의 공론조사장에서 만났다. 5시간이 넘는 숙의 토론으로 국민이 바라는 미래사회를 논의했다. 이와 병행해 분야별 전문가 대상으로 선호미래 설문조사도 실시해 국민의 의견과 비교하고, 선호미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민 참여단 43%가 보존분배사회를 선호미래 1위로 꼽았다. 도시와 농촌의 공존,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응,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생, 노동시장의 자유로운 이동, 협력과 사회적 책임성을 주요 가치로 추구하는 보존분배사회를 가장 살고 싶은 미래로 선택한 것이다. 전문가그룹(65명) 중 63%도 국민의 선택한 보존분배사회를 선호미래 1위로 꼽았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에서 도전 지향성을 확대하고,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제도를 마련하며, 성장 담론을 대신할 대안의 실행, 높은 복지 수준의 국민적 요구 등을 선호미래 비전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 참여단 34.9%는 안정성장미래를 가장 회피하고 싶은 미래로 꼽았다. 이 미래는 도시와 지방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격차의 확대, 경쟁의 과열로 사회적 문제 증가, 지구온난화 심화, 외국인 유입의 과다로 사회적, 문화적 갈등의 확대 등이 특징이다.

청소년 미래선호가치 설문 조사 기반 연구

민보경 외

본 연구는 미래 대한민국의 정책 로드맵 수립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 청소년의 미래선호가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이론적 분석 틀과 경험적 조사방법론을 제공한다.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현재 가치와 미래 선호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예측은 무한한 가능성과 확장성, 그리고 불확실성에 가려진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밑그림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가치와 관련된 국내외 이론 연구, 기존 가치 조사의 검토 및 분석, 청소년 미래 교육을 경험한 전문가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를 결합하여 중요 가치 영역과 개념 및 경험적 조사 방법론을 정립하였다. 그리고 전국의 만 15–18세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조사(554명)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성인 조사(630명)를 실시하여 청소년과 성인의 미래선호가치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청소년과 성인 모두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청소년은 성인과 비교하여 개인 차원의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청소년은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지만 그것이 곧 경제적 풍요를 의미하지는 않았으며 성인과 비교하여 다양성과 사회정의에 대한 개방성과 포용성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은 성인과 비교하여 국가에 대한 의무감은 낮은 편이며, 국가적 의무보다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서의 역할과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은 개인 차원의 가치 가운데 '자율'과 '성취'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게 나타나며 동시에 기존 제도와 질서에 순응하는 보수적 특성도 나타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향후 수행할 본조사인 한국인의 미래선호가치조사에서는 청소년의 관심 영역과 가치로 중요하게 부각된 영역인 과학기술, 세계 시민의 가치, 공동체 가치, 삶의 만족에 대한 주관적 가치 영역을 확대할 것을 제시한다. 앞으로 청소년의 미래선호가치를 주기적으로 조사함으로써 미래세대의 가치관 흐름과 변화를 파악하여 현재, 미래의 사회변화를 진단하고 예측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대의 정책미래선호에 관한 질적 연구 : 노동이민정책 · 가족정책 · 외교안보정책을 중심으로

정영훈 외

국회미래연구원은 2019년 1월 18일부터 1월 22일까지 만15세 이상~65세 이하 전국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을 이용하여 '정책미래에 대한 국민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20대가 가지는 선호의 경향과 체계는 외교안보정책, 지방분권정책, 기후와 에너지정책에서는 60대와 상당히 유사하게 보수적인 선호를 보인 반면 빅데이터의 활용, 새로운 생활공동체에 대한 정책 방향, 새로운 사회갈등에 관한 정책 방향, 안락사 허용에 있어서 2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선호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20대의 선호가 극명하게 표출되는 세 개의 정책분야, 즉 노동이민정책, 가족정책, 외교안보 정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근거이론접근법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선호형성 배경 및 이유 등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미래의 변화에 대비하는 정책 수립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향후 각 분야의 미래 전망 하에서 가장 사회적 ·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정책 분야는 노동이민정책이다. 노동이민자에 대한 20대의 타자화 전략은 이들이 처한 경제적 · 사회적 상황에 기반하고 있어서 쉽게 변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 유입에 대한 양적 · 질적 조절정책과 함께 내국인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사회통합정책을 수립하여 이주노동자에 대한 국민적 수용을 높여야 한다.

외국인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는 것은 외교안보정책에서 우리나라가 취하여야 할 전략적 입장을 선택할 때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인식을 가지게 할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미국 문화에 대한 동질성을 더 강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그리고 중국 문화에 대한 이질성을 더 강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미국과 중국 간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외교적 전략의 선택 폭은 그만큼 좁아질 것이다. 20대가 지금과 같이 중국인과 중국 문화를 극단적으로 나쁘게 평가하는 것은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매우 부정적인 현상이다.

가족 정책은 위의 두 정책 분야보다는 사회구성원 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정책 분야이다. 50대는 자신들이 유지하고 싶어하는 가족에 대한 가치관과는 별도로 가족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스스로 잘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바꿀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제도의 변화가 예상된다고는 하지만 위에서 전통적인 가족관과 새로운 가족관은 혼재할 수밖에 없고 혼재의 기간이 얼마나 길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가족 형태에 중립적인 정책이 필요하는 점이다. 그 핵심은 개인이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서 차별 없이 가족 형태를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인의 행복 연구

박기태 외

물질적 번영에도 불구하고 높지 않은 한국인의 행복수준 때문에 우리 사회의 행복 관련 담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행복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방법에 대한 준비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행복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실제 삶에 적용 가능한 행복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행복의 개념화, 행복지표체계 구축 및 행복지수 개발, 지역별 행복 분포 분석, 지역별 행복 및 행복 불평등 결정요인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행복 연구가 쾌락 및 주관적 안녕 중심이었다면, 본 연구는 역량이론을 바탕으로 인간이 존엄과 가치를 누리는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다양한 행복의 영역(건강, 안전, 환경, 경제, 교육, 관계 및 사회참여, 여가)을 제시하고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행복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주관적 만족도를 추가하여 한국인의 행복지수를 도출하였다.

한국인의 행복지수 도출 결과 상위 20%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도권과 호남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각 영역 별로도 경제영역을 제외하고는 종합지수와 비슷한 지역별 경향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삶의 만족도 자료를 활용한 주관적 삶의 만족도 평가는 지역별로 두드러진 격차가 발견되지 않았다.

행복의 하위영역별로도 지역별 차이가 존재한다. 건강 영역을 구성하는 주요 지표들이 의료 및 보건 시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계로 대도시 지역이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안전, 환경, 여가 영역은 대체로 농어촌 지역이 상위권을 차지하였으나, 경제영역은 대도시 지역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특징이 있다. 교육 영역은 다른 영역들에 비해 지역 간 격차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관계 및 사회참여 영역의 상위권에는 뚜렷한 경향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군 지역과 중소도시 거주민의 삶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별 행복 수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개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국민의 행복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책의 목표를 성장에서 지역 역량의 확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또 한 정책수단 역시 현금성 수당 제공과 같은 획일적인 방법을 지양하고 개인 및 지역 맞춤의 다양한 정책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한국인의 행복 측정」 기반 연구

허종호 외

한국은 현재 높은 경제적 조건 대비 행복 수준이 낮은 대표적인 국가이다.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는 국민의 행복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측정과 행복의 결정요인을 탐색할 수 있는 경험적 자료의 축적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행복 및 관련 변인을 측정하는 도구의 개발이 시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개념으로 인해 그간 행정부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본격적인 행복 관련 데이터를 생산하지 못하였다. 이에 국회미래연구원은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국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하여 2018년에 수행한 “한국 삶의질 조사 기반연구”(2018)에 이어 2019년 “한국인의 행복 측정 기반연구”를 연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본 연구는 과거 2년간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국제 표준화의 기준을 충족하면서 한국 사회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측정 도구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나아가 이를 통해 세계 속의 한국인의 행복 위치를 확인함과 동시에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우선적으로 행복에 대한 개념과 측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OECD Better Life Index와 같은 국제기구와 해외 선진국 및 국내의 기존 행복 측정을 위한 관련 연구과 측정도구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추가적인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한국인의 행복 측정 조사에 활용될 총 88문항의 구조적인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행복에 대한 직접적이고 다층적인 측정과 더불어서 행복을 결정하는 다각적이고 다층적인 예측요인을 탐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대규모 서베이를 실시하여 국가대표성을 갖춘 양질의 한국인의 행복 관련 데이터를 매년 생산할 예정이다. 국민의 행복 수준은 현 사회의 수준과 위치를 알려주는 지표이자 국가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행복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 활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장기발전전략 연구사업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국가장기발전전략 연구사업은 우리나라가 정치 · 경제 · 사회적으로 당면한 문제에 대해 국가운영 시스템의 시각에서 종합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의 결과물이다. 사업 결과물은 국가장기발전전략 연구시리즈 5권(총론, 거버넌스, 삶의 질, 혁신성장, 노동체제)과 주요국 미래전략 분석보고서로 구성된다.

- 국가장기발전전략 연구시리즈 I
  국가장기발전전략 연구 총론 : 새로운 발전전략의 모색
- 국가장기발전전략 연구시리즈 II
  국가장기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개혁 의제 연구
- 국가장기발전전략 연구시리즈 III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개혁 의제 연구 : 복지, 주거, 보건 부문을 중심으로
- 국가장기발전전략 연구시리즈 IV
  혁신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개혁 의제 연구
- 국가장기발전전략 연구시리즈 V
  노동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개혁 의제 연구
- 주요국 중장기 미래전략연구 분석

국가장기발전전략 연구 총론 : 새로운 발전전략의 모색

이선화 외

국가장기발전전략 연구시리즈는 우리나라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을 장기적이고 시스템적 관점에서 모색한 결과물이다. 각 연구보고서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정치적 과정과 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 혁신성장 역량 제고, 협력적 노동관계 구축 및 일자리 확대 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연구시리즈는 총론(제I권), 거버넌스 연구(제II권), 삶의 질 연구(제III권), 혁신성장 연구(제IV권), 노동체제 연구(제V권) 등으로 이루어진다. 연구시리즈의 제I권은 국가장기발전전략 연구시리즈의 총괄편으로 장기발전전략 연구의 분석 틀과 함께 부문별 연구결과를 유형화하고 종합하여 제시한다. 연구의 시계(視界)인 '장기'는 물리적 시간 개념을 의미하기보다는, 전략과제의 구조 전환적 특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총론에서는 국가장기발전전략 연구가 출발한 인식의 틀을 밝히며 그 틀은 다음 질문으로 요약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국의 국가운영체제는 어떠한 경로를 추구해야 할 것인가. 과거 경제성장을 성공으로 이끈 제도와 정책이 효력을 상실한 배경은 무엇인가. 국가장기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구축함에 있어 과거로부터 단절된 이상적 제도의 이식이 가능한가. 국가장기발전 연구가 단순히 비전 보고서에 머물지 않고 실현 가능한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구되는가.

분야별 연구대상에 따라 강조점의 차이는 있으나 본 연구시리즈는 한국의 장기발전 과제를 제시할 때 제도의 경로의존성과 제도 간 상호의존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로의존성이 발생하는 주요 이유는 기존 제도하에서 특권을 누리는 수혜집단이 더 나은 대안의 선택에 저항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문별 발전전략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제도의 경로의존성은 제도의 시스템적 발전과정에 주목한 거버넌스 연구(II권)과 혁신성장 연구(IV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새로운 정책 환경 하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시스템의 전환을 모색하고자 한다면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적 속성에 대해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도 간 상호의존성은 정치·경제·사회·노동 등 제도가 서로 맞물려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국가장기발전전략은 각 부문별 제도의 정합성과 상호성을 고려하여 제시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제도의 상호성은 의사결정 및 정책집행과 관련한 거버넌스 분야 개혁의제와 혁신성장이나 사회정책 분야의 전략과제가 매우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는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복지정책 및 사회서비스(주거·보건) 공급정책, 혁신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인적자원·공적 금융 정책, 고용창출과 혁신성장을 매개하는 노동정책 등 국가의 장기 발전을 위한 핵심 공공정책의 성공이 정책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의사결정시스템 및 정책을 수행하는 집행권력(관료제도)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느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전체 부문에 걸친 의제를 일관되게 제시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연구시리즈 제II권부터 제V권에서 도출한 전략과제와 개혁과제를 부문의 자율성과 제도간 상호성을 고려하여 유형화하고 종합한다.

국가장기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개혁 의제 연구

이선화 외

본 보고서는 국가 정책의 상위 거버넌스 체계, 즉 정부의 장기전략과 정책방향 및 전달체계를 결정하는 국가 의사결정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을 분석한다. 조직 측면에서의 연구대상은, 입법부(정당과 국회), 행정부의 관료조직 및 재정당국으로 구성되며, 기능의 측면에서는 대의민주주의를 통한 의사결정시스템, 관료제도를 통한 정책집행, 재정당국에 의한 재정운용을 다룬다. 연구의 공통 질문은 현재의 정부 시스템 및 관련 제도가 대한민국 국가 공동체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한지, 새로운 과제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을 혁신해야 하는지로 요약된다.

제 I 부는 거버넌스 시스템 차원에서 국가장기발전을 연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국가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포함하는 거버넌스 시스템이 중요한 이유는, 경제 · 사회 · 노동 · 교육 등 공공정책 각 분야에서의 공적 자원 재배치 및 공공서비스 제공의 성공이 결국에는 주권자의 정책 수요와 선호가 전달되고 정책화되는 방식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제 II 부는 국가 의사결정체제의 헌법적 원리인 대의민주주의 체제와 입법부의 기능을 분석한다. 현행 한국 의사결정과정의 문제로는 압축성장기에 효율성을 중시하던 대통령 및 행정부 중심의 거버넌스가 존속하면서 민주화된 제도와 그 운영 사이의 괴리가 커지게 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 의사결정시스템의 문제를 '비타협적 승자독식' 현상으로 규정한 후, 미래 의사결정 체계가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경쟁과 협상의 정치, 책임과 권한의 비대칭성 해소, 국회와 행정부 간 정보 비대칭성의 해소, 국민참여 증진과 수용성 증대 등을 제안하였다. 연구진은 현행 권력구조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미래사회적 문제와 정책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의사결정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는데 그 과제는 크게 국회 내부의 문제, 국회와 행정부 간의 문제, 국민참여형 의사결정 문제로 구분된다.

제Ⅲ부는 정책 전달체계를 담당하는 관료시스템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연구진은 과거 한국의 압축성장을 성공으로 이끈 원동력으로 칭송받았던 관료시스템이 왜 더 이상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지, 그간의 다양한 혁신노력이 왜 만족스러운 결실을 거두지 못하였는지에 대해 질문한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선 한국 관료제의 역사적 진화과정을 제도와 운영의 차원에서 조명하였다. 다음으로 민주화 · 시장화 · 정치화라는 정책환경 하에서 정책전달체계의 성과 제고를 위해 요구되는 관료제도 개혁과제를 관료의 정책역량 강화, 부처 이기주의 극복, 관료 정치화 문제의 해소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관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로는 충원제도와 승진제도를, 부처 이기주의 해소 과제로는 관할권 조정과 부처간 협업시스템 구축을 제언하였다. 관료제 정치화 해소를 위해서는 정치화 인정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로 구분하여 각각 개혁방안을 도출하였다.

제Ⅳ부는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 거버넌스를 다룬다. 재정 거버넌스는 정책 집행을 제약하는 경제(예산)적 제약조건 하에서 예산의 편성 · 심의 · 승인과 관련된 의사결정 체계를 의미한다. 재정 거버넌스가 담당하는 재정 기능은 크게 정부의 정책을 예산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과 거시적 재정안정화를 유지하는 것, 두 가지로 요약된다. 제Ⅳ부 역시 고도성장기 재정운용의 성과와 현재의 한계를 조명하는 한편 환경변화에 대응한 재정운용의 과제를 제언한다. 재정 분야의 현재 문제점으로는 재정 거버넌스가 사회경제구조와 민주주의라는 정책환경 변화에 적절하게적응하지 못하였다는 점, 그 결과 재정운용의 지속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재정분야의 개혁과제로는 세입–세출–국가부채라는 재정제약에 대한 관리방식과 함께 국회와 행정부 재정당국으로 구성되는 재정 거버넌스의 역할을 제시한다.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개혁 의제 연구 : 복지, 주거, 보건 부문을 중심으로

허종호 외

우리나라는 단기간 경제성장과 함께 민주주의 발전을 이루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대내외적 미래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위험 요인의 등장으로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래 사회의 다양한 위협 요인과 불확실성을 반영한 미래 정책 목표와 추진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분야인 복지, 주거, 보건을 중심으로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장기발전전략 수립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 정책 과제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본 연구는 미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장기 미래의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단기 정책 과제 및 전략을 제시하였던 선행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미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현가능한 정책대안이 마련될 수 있으며,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혁신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개혁 의제 연구

여영준 외

우리 경제가 단기간에 압축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었던 데에는 기술개발 및 산업발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지식이나 기술들을 확보하고 개발하는 데 적합한 기술학습 능력을 적절히 축적 및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혁신시스템은 산업기술과 제품 경쟁력이 고도화되어 선진국들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 우리만의 기술발전 경로를 개척해야 하는 상황에 진입하였다. 기존 혁신체제의 기반이 되었던 추격형 경제 모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바탕으로, 복잡기술로 상향하는 기술학습 및 창조적 학습이 요구되는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환기에 진입한 우리나라 경제체제는 추격형 단계에서 유효하였던 기술학습 역량에 특화된 제도적 루틴에 고착화되어 있으며, 전환기를 마주하는 성장통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혁신시스템의 전환을 통한 혁신성장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이 강조되는 우리나라 경제체제에서, 학습역량 전환과 혁신체제 내 전반의 기술학습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노력이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자 한다. 기술학습 역량 구축 관점으로, 우리나라 혁신체제 내 주요 제도적 부문들의 속성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체제의 경로의존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기술학습 역량 구축 및 혁신체제의 성공적 전환에서 장애물로 작용하는 주요 제도적 부문의 정책문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 내 도출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정책혁신과제를 고민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경제체제가 바람직한 성장의 질을 달성하기 위한 혁신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경제의 성장과정을 혁신체제 내 기술학습 역량 형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제도적 부문들의 상호작용에 따른 결과물로서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국가혁신체제 내 기술학습 역량을 형성하는 주요 부문은 새로운 기술 및 지식의 창출을 일으키는 부문(과학기술 부문), 기술발전의 양상을 결정짓고, 기술혁신과 상호보완성을 형성하는 인적자본을 양성하는 부문(교육 및 인적자본 부문), 그리고 기술혁신 부문과 인적자본 간의 상호작용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부문으로서 산업정책 부문(정책금융 부문)을 고려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신기술 및 복잡기술로 상향하는 기술학습 및 창조적 학습역량 구축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창조적 학습'과 '학습의 파급효과'를 촉진하는 환경 구축 목적의 정책혁신과제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내용은 기술학습 형태의 전환은 혁신체제 내 다양한 제도적 요소들 간 상호작용에 의해 발현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성장 잠재력 확대 및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도 및 정부 정책은 국가의 기술적 수준 및 기술학습 패러다임에 따라 함께 공진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노동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개혁 의제 연구

정영훈 외

본 연구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외환위기 이후에 추진되어 온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개혁정책의 성과, 한계, 실패 요인을 분석·평가함으로써 국가 미래발전전략 수립의 경험적 근거와 방법론적 기초를 확보하는 것이다. 둘째는,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대안적인 노동정책 패러다임을 재설계하고, 패러다임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전제조건과 세부 혁신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국가발전전략의 수립과 국회의 적극적 역할 제고 방안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다.

미래 한국 사회에 놓여 있는 노동개혁의 기본 방향은 한국 사회의 조건과 능력에 부합하는 유연안전성 모델을 구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연안전성 모델이 성공하려면 신뢰를 기반으로 이해관계를 교환할 수 있는 조건과 전략이 정교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과 능력을 갖추어 가는 과정으로 사회적 노동시장체제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노동시장체제에서는 임금과 고용이 기업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완화하고 내부자와 외부자의 격차를 사회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주된 목표가 된다. 연공형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일터 혁신을 통한 생산성과 임금의 정합성을 높임으로써 장기적으로 직무형 노동시장의 비중을 확대해 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신뢰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 간 타협을 모색하면서 유연안전성의 조건과 능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미래노동시장체제가 한국형의 유연안전성 모델로 가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노동시장정책으로 전체 노동자들에게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높여 주는 것이다. 특히, 이른바 이중노동시장의 2차노동시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고용안전망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구축해야 한다.

미래노동체제 형성을 위한 노동개혁과 노동시장정책 설계에서 핵심적인 관건은 노사관계체제의 미래지향적 재편에 있다. 미래 노사관계체제를 위한 노동개혁 방향은 통합과 혁신이다. 통합과 혁신의 미래 노사관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과제는 취약 노사의 조직화 강화와 이해대변 제고, 기업–초기업–국가 수준의 교섭과 사회적 협의 연계이다. 이를 위해 정책 과제로 사용자단체의 활성화, 노사협의회의 종업원평의회로 전환과 확대 적용, 초기업교섭 촉진을 위한 단체협약 확대 적용, 교섭위원 육성을 위한 분쟁조정 전문교육 투자 확대, 사회적 협의와 단체교섭, 종업원대표제도와의 연계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 특히, 노사관계 성과 평가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국회가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국회가 노사관계 거버넌스 구조의 구축을 시도하는 것이다.

주요국 중장기 미래전략연구 분석

박성원 외

본 연구는 국가 수준의 미래연구를 수행할 때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구성 요소와 시너지를 내기 위한 구성 요소 간 적절한 연결에 대해 밝히고 있다. 우리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부의 고민과 대안은 정부 정책의 연속성 보장, 중장기 비전 제시, 미래 변화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연결되어 시민사회뿐 아니라 기업들도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된다. 국가 수준의 미래연구를 잘 해야하는 이유다.

연구진은 장기미래예측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해외 사례를 고찰하면서 이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국가 수준의 미래연구 수행에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해외 사례를 고찰하는 관점에 대해 연구진은 미래전략의 수립 주체(S), 환경(E), 자원(R), 메커니즘(M)을 연결하고 통합해 SER-M 모형을 제시한다. 이 모형을 통해 미국, 영국, 유럽의회, 네덜란드, 싱가포르, 핀란드의 미래연구를 분석했다.

국가 수준의 미래연구를 수행할 때, 주체의 관점에서는 최고 의사결정자의 높은 관여도, 고위공무원 대상 미래예측 역량 향상 과정 제공, 미래연구의 결과로 변화를 일으킨 챔피언 발굴 및 확산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환경의 관점에서는 위기의 때에 미래전략을 제시하고, 시대적 불안감으로 사회적 연대가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 경제적, 산업적 이익만 고려하지 말고 기술의 사회적 영향을 다각도로 예상하고 대안을 내놓는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미래연구를 방향 탐색과 실행 계획으로 나눠 각각에 대한 충실한 내용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도 얻었다.

자원의 관점에서는 세계의 다양한 미래연구기관과 협업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고 연구할 수 있는 미래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마지막으로, 메커니즘의 관점에서는 미래연구를 한 번에 끝내지 않고 실행과 보완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제도의 구축, 새로운 정책 담당자가 임명되는 시기에 맞춰 미래연구를 제공해 미래연구가 추구하는 대안의 실행성 제고가 필요함을 제시했다. 또한, 전국 단위의 국민 선호미래 조사가 정기적으로 실행되고, 그 결과로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어야 국민의 미래연구 참여도를 높이고 연구의 신뢰성이 높아짐을 배웠다.

본 보고서는 결론에서 국가 수준의 장기 미래연구를 평가하는 조사방법을 제안했다.

국제전략 연구사업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그동안의 한국 국제전략 연구는 중견국(middle power)으로 성장한 한국의 국익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해왔으며 국익에 기반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국제전략 개발에 소극적이었다. 이런 점을 극복하고자 본 연구는 한국의 국익을 중견국 관점에서 안보, 경제, 그리고 문화라는 차원에서 정의하고 이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중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전략을 개발했다. 안보 전략은 한국의 생존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북 전략과 동맹 전략 개발에 초점을 두었으며 경제 전략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무역, 금융, 환율 그리고 개발원조 전략 개발에 집중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화 전략은 디지털 혁명 시대 한국의 매력을 알리기위한 쌍방향 문화외교 전략 개발에 그 주안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한국이 불확실성을 기본 특징으로 하는 미래 국제정치에서 한국의 생존전략을 다층적 차원에서 개발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국제전략 연구
  : 안보 · 경제 · 문화전략을 중심으로

국제전략 연구
: 안보·경제·문화전략을 중심으로

유재광 외

본 연구는 한국의 중장기 국제전략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는 한국의 국익을 객관적으로 정의하고 미래 한국이 마주할 환경제약을 식별한 후 이 제약하에서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제전략–즉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하지만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한국의 국익을 안보(생존), 번영(지속적 경제성장), 문화(매력)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정의하고 미 · 중 경쟁이라는 거시적인 환경제약하에서 중견국인 한국이 위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 및 도출하였다.

먼저 안보 영역의 국제전략으로는 미 · 중 경쟁의 심화에 대비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피하는 전략이 제시되었다. 일명 '글로벌 동맹' 전략과 '조건부 점진적 지역동맹 강화 전략'이라 이름 붙여진 이 전략은 미래 미 · 중으로부터 한쪽의 입장을 강요받을 시 한미동맹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미국의 글로벌 차원의 동맹전략을 지지하되 동북아에서는 중국의 견제가 심해질 것을 대비해 한미 양자 동맹의 공고화 수준을 중국의 압박 정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조절한다는 전략이다.

급부상하는 중국과 관련하여서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내실화' 전략이 도출되었는데 이는 중국 최고위층과의 전략적 소통 채널을 제도화하여 대북문제로 불거질 문제들–예를 들어 추가 사드 배치 문제–을 예방적으로 회피하자는 전략이다. 아울러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한 · 미 · 일 삼각 동맹(quasi alliance)의 틀을 유지하고 정 · 경 분리 원칙에 근거해 자유주의적 원칙을 회복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 이는 최악의 경우 권위주의적이고 민족주의를 근간으로 삼는 중국의 동북아에서의 현상 파괴 전략–군사적 전략 포함–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라 하겠다.

경제영역의 국제전략은 미 · 중 경쟁과 중국의 부상으로 심화 될 불확실성 감소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먼저 미 · 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불안정한 국제경제 질서를 신균형(a new normal)으로 가정하고 대안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미국의 보호주의적 무역정책과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 동아시아에서 추동하고 있는 '중 · 일 간의 자유무역 레짐 형성의 경쟁에 적극 참여'하여 이 레짐들이 써 내려갈 규칙과 표준의 제정에 적극 참여야

한다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통화와 관련해서는 '방어적 통화정책'을 주문하고 있으며 미 · 중 간의 통화전쟁 발생시 평가절상 압박을 선도적으로 막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과 관련해서는 '국제여신확장에의 지속적인 공헌' 및 '금융 안정화 외교–즉 Basel IV와 FSB–강화' 그리고 '디지털 금융 보편화에 대한 대응 전략'이 제시되었다. 기술 분야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AI, 그리고 사물인터넷으로 대변되는 '4차산업혁명 분야의 국제규범 형성 노력에 적극 참여'할 것을 전략으로 주문하고 있으며 ODA 분야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제규범 일치형 ODA 전략'이 제시되었다.

문화 부문에서 핵심적으로 도출된 전략은 '쌍방향 소통 그리고 보텀업(bottom–up) 방식의 문화외교'이다. 과거 정부–관–재외공관 중심으로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되어 온 한국의 긍정적 이미지 전파 전략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현재의 문화교류 핵심 채널인 SNS와 유튜브 중심의 쌍방향 소통에 기반한 한국 매력 알리기 전략이 도출되었다. 주목할 점은 이 매력 전파 전략에서 한국 정부는 소통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혹은 플랫폼만 확충하는 것만을 도왕 하며 교류의 내용과 방식은 민간과 시민사회에 일임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대(對)한국 가짜뉴스 전파 방지 전략'과 '문화 ODA 전략' 이 새롭게 도출되었다.

본연구가 국회에 주는 함의는 명확하다. 국회는 지난 세기 행정부가 주도한 국익의 정의 및 전략개발에 적극 관여해야 한다. 이는 해당 상위인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산업통상위원회',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 데서 시작하여야 한다. 아쉽게도 국회는 지난시기 외치(外治)와 관련해 행정부의 전문성을 암묵적으로 인정하여 스스로가 지닌 능력과 의지를 스스로 제어한 면이 없지 않다. 이제는 이런 수동적인 방식의 관여에서 벗어나 국제적 이슈와 관련 건설적인 행정부 감시 및 견제 기능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국회 스스로가 한국의 국익과 국제전략에 대한 장기적이고 명확한 비전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본 연구는 국회의 이러한 노력에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2019년
국회미래연구원
연차보고서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미래영향평가 연구사업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본 연구 시리즈는 행정부의 법정 중장기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메타평가를 실시하여 국가장기전략 추진 과정에서 국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장기전략 추진을 위한 국회의 기능 개편과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실시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과학기술 · 정주여건 · 사회정책 분야의 주요 중장기계획에 적용하여 메타평가 예비연구를 수행하였다.

- 국가장기전략 추진을 위한 국회의 기능 개편 방안 연구
-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실시 방안 연구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예비연구
- 정주여건분야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예비연구
- 사회정책분야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예비연구

국가장기전략 추진을 위한 국회의 기능 개편 방안 연구

조인영 외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장기발전전략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을 고찰하고, 국회의 참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은 현실을 바람직한 미래 모습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미래에 직면하게 될 많은 도전에 비추어볼 때 장기 정책의 부재 및 정책의 연속성 부족은 큰 문제 중 하나로 지적받고 있다. 현실적으로 대통령 단임제하에서는 정책의 연속성과 장기적 시계가 부족할 수 있기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가 장기전략의 마련 및 추진에 관여할 필요성이 있다.

이 보고서는 현 제도하에서 국가장기전략 마련 및 추진을 위해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에 대한 실행 전략을 도출한다. 보고서는 크게 문헌연구, 국가장기전략의 수립 및 집행과 관련된 국내외 사례 분석, 국회조직 검토, 전현직 국회의원 대상 인터뷰를 통한 실행 전략 마련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례분석에서는 입법부가 중심이 되어 국가장기전략을 추진하는 핀란드와 싱가포르의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이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회의 조직을 검토하여 국가장기발전전략 관련 국회의 역할이 강조되는 경우 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직을 파악하였다. 추가적으로 전현직 국회의원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국회 기능 강화에 대한 통찰을 얻고 실질적인 수행 방안을 확인하여 장기전략 수립 및 집행과 관련된 여러 통찰력 있는 의견을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실행전략을 제안한다. 우선 미래전략을 담당하는, 국회가 주체가 되는 위원회 설치(가칭 미래전략특별위원회)가 필요하며, 다만 이전 국회에서의 실패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미래전략특위의 구성 시 법안심의권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미래전략 의제를 다루고 있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을 미래전략특위의 소관 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입법부와 행정부가 국가장기전략 수립에서 접점을 찾고 소통을 확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국회가 제시한 계획에 따라 행정부가 국가장기전략을 적절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장기발전전략을 수립하는데 행정부와 입법부가 함께 기여할 수 있다면, 미래지향적 시계를 가지고 장기적 국가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나갈 수 있는 더욱 탄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실시 방안 연구

이채정 외

본 연구는 2019년 기준 533개의 법정 중장기계획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정부 중장기계획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부 중장기계획에 대한 구성, 수립절차, 내용 측면에서의 평가틀을 고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론을 보완·발전시켜 정부 중장기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메타평가 실시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법률에 근거하여, 5~20년 시계(視界)의 법정 중장기계획을 수립·집행하고 있으나, 중장기계획의 수립 목적 달성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개별 정책이나 사업 수준에서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전 부처 중장기계획의 현황 파악과 중장기계획 수립절차 및 내용의 실효성, 중장기계획 간 정합성, 장기적인 전망과 기대효과 등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533개 법정 중장기계획을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부가 71개로 전체의 13.3%에 해당하는 중장기계획을 작성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58개(10.9%), 환경부 55개(10.3%), 보건복지부 42개(7.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8개(7.1%) 순으로 집계되었다. 타 중장기계획에 의해 참조(인용)되는 계획은 과학기술기본계획(13개), 국토종합계획(12개), 산림기본계획(6개) 순으로 나타났고, 타 계획을 참조(인용)하는 계획은 사회보장기본계획(9개), 아동정책기본계획(7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7개) 등 주로 사회정책분야 중장기계획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학기술·정주여건·사회정책 분야에서 각각 10개의 주요 중장기계획을 선정하고 구성·수립절차·내용 측면에서 검토하여, 중장기계획 메타평가의 기준과 평가틀을 도출하였다. 분야별 전문가 논의 및 재정사업 분석제도, 사전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분석을 종합하여, 타당성(중장기계획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수립되었는가), 충실성(중장기계획으로서 필요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가), 실현 가능성(중장기계획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협력이 필요한 부처 및 계획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있는가?)를 메타평가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향후 중장기계획 평가의 주체, 대상, 방법, 주기 등에 대한 행정부와 입법부 간 논의를 바탕으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중장기계획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중장기계획 수립의 의무조항 포함 여부를 재검토하여 반드시 필요한 중장기계획을 중심으로 국가장기전략 추진체계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 중장기계획은 입법사항 및 재정사업과 연결되므로 중장기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결과를 국회상임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에서 활용하는 방안 등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예비연구

김홍범 외

본 연구는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방안 연구”에서 도출한 중장기계획 메타평가(metaevaluation) 방법론을 분야별 주요 중장기계획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정부 각 부처가 5~10년 단위로 수립·집행하는 중장기계획의 현황과 각종 사전평가제도의 구성 및 방법을 파악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주요 중장기계획에 대한 심층분석을 수행하여, 정부 중장기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메타평가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행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중장기계획 중 최상위 계획인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분석의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평가기준에 따라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구성, 수립절차, 상세 내용 등 3개 영역별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가 경영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확인하고 새로운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과학기술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계의 최상위 계획으로,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방향 설정과 부처별 계획에 많은 파급효과를 주게 된다. 동 과제에서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선 중·장기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혁신에 영향을 미칠 트렌드 및 미래사회 이슈 전망은 필수적 요소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정책 수립 시 미래전망보다는 해당 정권의 국정과제 및 국정운영 기조에 따라 중·장기 정책방향이 설정되어 왔다. 과학기술혁신 정책에 영향을 미칠 트렌드 및 이슈 도출, 파급효과 분석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미래전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의 기본계획 간 연계성 측면에서는 각 부처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타 부처의 중장기계획을 참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최상위 계획인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내용을 각 분야의 종합계획이 이어받고 이를 세부계획이 연계하는 방식이 이상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계획 수립 시부터 담당부처, 참여부처, 기재부(예산당국), 국회와 관련 연구계 및 산업계, 국민 등이 모두 참여·논의하고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해당 중장기계획 및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경우, 예산을 포함한 강력한 실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개별 부처 단위보다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차원에서 수립하고 대통령이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며, 세부기술·응용 분야의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중장기계획의 시행계획에 포함된 연구개발사업들이 대부분 해당 계획을 근거로 기획·추진되므로 연구개발사업 목록과 예산을 기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정주여건분야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예비연구

민보경 외

정부는 주요 정책 및 사업의 개별 법령에 따라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중장기계획 절차 및 내용의 실효성, 유관 중장기계획 간 정합성, 장기적인 전망과 기대효과 분석이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를 위해 국회미래연구원에서 도출한 방법론을 정주여건분야의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에 적용함으로써 정주여건분야에 적합한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틀을 마련하고 중장기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전략과 과제를 부문별로 평가기준을 통해 살펴본 결과, 국토 · 도시 · 지역 부문은 전략과 추진과제의 응집성, 타 계획과의 내용적 유사중복 검토는 제시되어 있으나 파급효과 분석은 나타나지 않았다. 환경 부문의 경우,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이 상당 부분 겹치는데 두 계획이 상충되는 지점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부재하여 시행단계에서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교통 부문은 대규모 인프라 건설과 관련하여 이행일정의 구체성, 재원조달방안, 기대효과의 계량화 등이 미흡한 편이었다. 그리고 주거 부문에 있어 미래전망 분석 시 다양한 동인에 대한 검토와 전망이 부족하였으며, 지역경제 및 산업 부문은 파급효과 분석은 제시되어 있으나 객관적 · 과학적 자료에 근거한 분석은 미흡한 편이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종합계획의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부처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은 업무 조율 프로세스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시행단계에서의 전략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지표 중심적 정책과 과학적 계획으로서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 등을 제안한다. 또한 중장기계획 메타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5년 범위 계획과 20년 범위 계획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계획의 시간적 범위를 고려하여 구체성 정도, 기대효과 제시, 단계별 실행 방안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체크리스트 방식 이외의 다양한 방식으로 정성적 평가기준을 확대하는 것을 제안한다.

사회정책분야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예비연구

허종호 외

본 연구는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방안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2019)에서 도출한 중장기계획 메타평가(meta-evaluation) 방법론을 사회정책분야 중 대표적인 중장기계획인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수정계획에 적용하는 기반연구(preliminary study)로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을 대상으로 메타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STEEP 방법론, 즉, 사회적(society), 기술적(technology), 경제적(economy), 환경적(ecology), 정치적(politics) 영역으로 구분한 사회정책분야 정책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이를 활용하여 저출산 · 고령화에 미치는 저출산 추세의 유지 및 심화와 고령화의 가속화,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과 경제활동 증가, 핵가족화, 주택 및 자녀 교육비용의 상승,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경제성장에 따른 의학기술의 발전, 소비수준의 증가 등에 따라 평균 수명의 연장, 부양비의 급증, 연금제도의 위기와 같은 경제적 요인 등을 살펴보았다.

메타평가를 위한 타당성, 충실성, 실현가능성의 기준을 고려하여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의 구성 · 수립절차 · 내용 측면에서의 검토항목(check-list)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구성 측면은 중장기계획의 목적, 법적 근거, 수행주체 등과 같은 형식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수립절차 측면은 중장기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인 수행주체 간 협력, 이해관계자의 참여, 이전 계획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여부 등을 포함한다. 내용 측면은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정책의 목표설정, 정책환경에 대한 분석 방법 및 분석 자료 등을 포함한다.

종합 분석결과,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은 향후 가장 영향력이 크고, 문제해결에 장기적인 시간과 정책적 노력이 소요되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므로 10년 단위의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을 요구하였다.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 내에 미래를 예측하고, 중장기적인 정책환경의 변화 등에 대한 고려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원칙은 무엇인지, 어떤 근거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였는지, 재정분배의 원칙은 무엇인지,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된 사항은 무엇이었는지, 정책효과에 대한 학술적 근거는 확인하였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각종 사회정책에 중장기 메타평가를 특성화, 고도화시키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국회정책역량강화 연구사업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국회정책역량강화사업은 정당의 정책 산실인 정책위원 및 정당 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초당파적 정책 의제를 발굴 · 연구하고 그 해결 방안 및 이행 전략을 도출하여 국회에 제시함으로써 국회연구원법 제1조에 따른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사업이다

- 국회 신뢰 제고 방안 연구

국회 신뢰 제고 방안 연구

정영훈 외

국회미래연구원은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5개 정당의 정책연구소 연구책임자와의 협의를 거쳐 공동 연구의 주제 및 기관별 분담, 연구추진 방안에 합의하였고, 같은 해 4월과 5월 사이 위탁연구 계약을 마친 뒤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였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의회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신뢰도 조사를 비교 분석하였고, '국회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와 '국회 보좌진 대상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의회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은 유형으로 조사된 국가는 터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민주화에 대한 기대가 큰 민주주의 저발전 국가 내지 민주화 초기 국가들이다. 한국도 1990년 초까지는 전체 응답자의 2/3가 의회에 대해 신뢰를 보냈다. 민주주의 선진국 역시 1990년대 이후 의회에 대한 신뢰가 점차 하락해왔는데, 그 가운데 의회중심제이면서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가진 스웨덴, 핀란드, 뉴질랜드, 독일, 네덜란드 등이 영국이나 일본에 비해 의회 신뢰가 높았다. 민주주의가 안정된 나라 가운데 대표적인 의회 저신뢰국가는 대표적인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과 한국이 속해 있으며, 의회중심제 가운데는 일본과 영국이 저신뢰 의회로 조사되었다.

국민일반과 국회보좌진 의식조사 및 5당 위탁연구를 통해 얻게 된 가장 큰 교훈은 '많은 일을 하는 국회'가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하는 국회', '더 많은 법안 발의하는 의원'이 아니라 '더 좋은 법안 발의하는 의원'이 평가되는 의회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데 있었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연평균 회기 일수가 150일 안팎인 데 비해, 우리 국회는 16대에서 19대 사이의 연평균 회기 일수는 283일이다. 법안의 발의와 처리를 기준으로 봐도 한국 국회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회기 일수를 늘리고 법안 처리를 양적으로 많이 하는 것보다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을 하는 국회가 되는 것으로 관심의 초점이 달라져야 한다.

5당 정책연구소와의 공동 연구에서는 다양한 주문이 제기되었다. 우선 위원회 차원에서는 소위원회와 상임위의 심의 능력과 국회 지원기관들의 역량을 중요 의제에 집중시킬 방안과 함께 소관위원회–관련위원회 연석회의, 전원위원회를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7–8월 임시회를 '결산과 국정감사 국회'로 만드는 방안과, 국정감사 기간 관련 현행 '30일 이내' 규정을 폐지해 위원회별로 소관 부처를 나누어 심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 의사절차 진행과 관련해서는 국회법은 지켜가며 평화적으로 갈등해야 한다는 점과 교섭과 협치가 국회의 기본 규범이 되게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밖에도 국회 신뢰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제도개혁 과제의 도출과 합의 모색의 시도가 있었다. 각 정당 연구소의 제안을 통해 20개의 개혁 과제 제안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2020년에도 정당 간 공동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자체연구역량강화 사업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자체역량강화 사업은 연구원 내부의 미래연구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미래연구 관련 교육 · 연수 및 네트워크 지원 활동과 더불어 미래연구 방법론 개발을 위한 예비 연구 및 융합형 미래연구 공모 추진하여 대내외적 미래연구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국회미래연구원 2050년 미래연구 과정 고찰
- 미래의 급격한 기술 발전과 공공서비스 패러다임 변화
- 미래 대한민국의 저출산과 일자리에 숨겨진 피드백 루프와 시나리오

국회미래연구원 2050년 미래연구 과정 고찰

박성원 외

본 연구는 국회미래연구원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수행한 2050년 미래연구의 과정을 고찰하고 그 성취와 한계를 논의한다.

세계의 주요 미래연구기관은 기관 고유의 미래연구 이론과 방법론을 정립하고 있다. 이들 연구기관은 오랫동안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미래연구 역량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국내 처음으로 국회 안에 중장기 미래를 예측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목적을 위해 설립한 국회미래연구원이 장차 세계적인 미래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난 연구과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연구진은 1) 2050년 미래예측, 2) 예측을 바탕으로 국민의 선호미래 선택, 3) 선호미래 실현을 위한 정책 제시, 4) 미래연구의 지속적 평가라는 순환적 모형을 가정하고, 각 단계별 연구의 과정과 경험을 되짚어보았다. 2018년에 중점적으로 실행한 13개 분야의 2050년 미래예측과 이를 종합한 시나리오 도출, 2019년 국민의 선호미래를 확인하기 위해 실행한 공론조사와 전문가 대상 선호미래 조사, 선호미래 실현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결정 및 정책 제안, 내부 연구진의 미래연구 과정 평가까지 서술했다.
지난 2년 동안 수행한 미래연구를 평가한 결과, 분야별 이슈를 융합하고 통합하는 연구자의 역량, 미래예측의 변수 도출 정교화 노력, 중장기 미래예측의 방법론 개발, 예측과 정책의 연결고리 강화 등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야별 전공에 따라 상이한 미래예측의 방법론 조정, 장기적 미래예측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데이터의 확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미래연구 결과의 제시 등도 향후 과제로 남았다.

지난 연구의 과정을 되짚어 보면서 연구진은 정권의 부침에 관계 없이 미래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의 중요성, 시민들의 미래연구 참여 기회 확대, 미래연구를 통한 정책을 제시할 때 미래정책의 내구성 테스트 노력, 내부 연구진의 끊임없는 비판적 평가 등은 앞으로도 지켜가야할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특히, 연구진은 시민사회가 국가 수준의 미래연구 필요성에 공감하고, 시민들의 참여로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믿음을 향상시키도록 국회미래연구원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래의 급격한 기술 발전과 공공서비스 패러다임 변화

문명재(연세대학교 행정학과·한국행정학회) 외

본 연구는 공공서비스 패러다임이 사회경제 전반의 변화와 함께 지난 수십 년 동안 변화해왔음에 주목하여 급격한 기술(disruptive technology)의 발전이 공공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를 야기할 것을 전제하고, 미래 공공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 양상과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급격한 기술 발전이 어떠한 미래 공공서비스 내용의 변화를 야기할 것이며 그로 인해 공공서비스 수요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정부가 어떠한 기회와 위협을 경험할 것인지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제언하였다.

연구진은 4차 산업혁명 및 급격한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 양상과 각 기술이 가져올 기대 효과들을 국내외 사례와 함께 검토하여 이를 통해 미래 공공서비스가 어떠한 행정 업무의 단계별 변화와 정부 조직 내부의 변화, 공공서비스 분야별 변화를 겪을 것인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논의를 위해 문헌을 검토하는 한편 만 20세 이상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전문가 11명을 대상으로 한 자문 결과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정보수집 단계와 공공서비스 단계에서는 이미 상당 부분 정부 역량의 향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정부 내부에서의 처리 활용 능력에 있어서는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나, 다른 단계에 비해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서비스 본연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정부 조직의 재구조화, 구조 및 인력 운영의 유연성 증대가 이루어질 것이나 기술 관련 윤리 문제의 대두로 이를 통제할 정부의 역할 또한 증대될 가능성 또한 있을 것이라 예상되었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 시장 간의 관계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정부의 영향력이 현재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과 과학기술이 초래할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이 정부와 민간, 시장 간의 관계에서 정부의 역할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이 상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부 규모 역시 기존 업무를 기술이 대체하더라도 새로운 업무가 발생할 것이므로 오히려 정부 인력과 재정 규모가 유지 내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책 분야별 주로 활용될 기술들 역시 주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데이터 관련 기술들이 꼽혔으며 분야에 따라 일부 가상현실이나 로봇, 사물인터넷 등이 꼽히기도 하였다.

한편, 행정업무의 단계별 변화와 정부 조직 내부의 변화, 공공서비스의 분야별 변화를 바탕으로 급격한 기술발전으로 인해 미래 사회에서 발생 가능한 기회와 위협을 기술 자체에 의해 발생되는 것과 정부 조직 내부에 발생되는 것,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에 따른 것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기회의 측면에서는 급격한 기술의 초지능, 초연결성, 민첩성 등에 의해 정부 조직의 민첩성과 유연성이 증가하고 공공서비스 제공 차원에서도 실시간 · 맞춤형 대응이 수월해져 공공서비스 제공을 수요에 맞게, 혹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반면, 기술에 쓰이는 데이터가 갖는 한계와 각종 윤리적 문제, 책임 소재의 불분명성,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 인간의 과학기술 적응 및 이해 속도 관련 문제 등 각종 위험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공공서비스 패러다임상의 기회와 위협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미래 공공서비스 패러다임의 특징을 5가지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기술 발전에 의해 수요에 대응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효율성을 제고하게 되면서 공공서비스가 제공하려는 본연의 가치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정부 조직 내에서도 인간의 판단이 중요한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권력의 분산과 사회의 개방성 확장이 가능해져 사회 전반적인 신뢰가 증대될 것임을 예상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제기될 각종 윤리적 문제, 조직 내부의 기술 부적응 문제, 공공서비스 수혜자 간 불평등 문제, 데이터 자체의 왜곡 문제, 장기적 관점의 부재 문제 등을 반드시 유념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행정부의 대응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하였다.

미래 대한민국의 저출산과 일자리에 숨겨진 피드백 루프와 시나리오

정창권((사)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외

정부의 저출산 정책과 일자리 정책이 그 배경과 추진 전략이 다르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양대 정책을 비교 분석한 정책의 도출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이를 위해 저출산 정책과 일자리 정책의 연계성을 분석해서 미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하였다. 특히, 저출산과 일자리, 또는 저출산 정책과 일자리 정책을 연계해서 분석한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양대 정책의 연계성을 분석하여 정책별로 시행되었을 때의 칸막이 사고(silo thinking)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고로 정책 제안을 하는 첫 연구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론인 시스템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는 미적분 계산을 기반으로 한 공학 기반으로 복잡한 요인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방법론으로서 정량적 연구 방법론인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정성적 연구 방법론인 인과순환지도(Causal Loop Diagram)를 통해 미래 시나리오를 도출하기에 유용하다. 이를 활용한 분석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자리가 저출산으로 주는 파급효과는 일자리가 부족해서 취업률이 낮으면 미래 기대 수익도 낮아져서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긴다는 결과를 확보하였다. 마찬가지로 일자리가 많아지면 출산 여건 중에 중요한 요인이 해결되기 때문에 출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한편, 저출산이 일자리에게 주는 관계는 출산율이 높으면 인구가 많아져서 일자리 경쟁률이 높아지고 출산율이 낮아지면 인구가 적어져서 일자리 경쟁률이 낮아진다는 논리를 확보하였다. 일자리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비해서 출산율이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는 상대적으로 시간 지연 효과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저출산 정책과 일자리 정책의 연계성을 탐색하고 두 정책 간의 피드백을 밝혔으며 이런 논리적인 추론 과정을 통해 각 미래 시나리오에 따른 정책 시사점을, 미래 일자리를 고려한 저출산 정책, 미래 인구를 고려한 일자리 정책, 스

마트 성장 시대의 일자리와 인구의 공진화를 지향하는 전략 등 3가지로 정리하였다. 공통으로 제안하는 것은 저출산 정책과 일자리 정책을 기획 · 조정 · 집행하는 조직은 두 정책이 피드백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 상대방의 정책과 연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부서를 신설하거나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통합 정책을 만들거나 통합 조직을 조직할 때 매우 경계해야 하는 것은 효율성을 내세워 저출산 정책 전문가 집단과 일자리 정책 전문가 집단으로 나눠서 각자의 업무를 수행해서 합치는 업무방식에서 벗어나 종합 사고를 통한 협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단행본

2050 대한민국 미래 보고서 – 미래를 만드는 변수들, 우리가 만나게 될 미래

국회미래연구원·오준호 지음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이다. 이에 맞춰 2018년 출범과 동시에 2050년의 미래를 예측하고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미래영향 환경변수 및 시나리오 도출 연구'에 착수하였다. 연구진은 먼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13대 분야를 도출하였고, 연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분야별로 내부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를 팀으로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13대 분야 대부분에서 이대로 간다면 암울한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예측되었고, 암울한 미래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지 다양한 정책 대안과 방향을 함께 제시하였다.

미래는 우리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인 만큼 우리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바람직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현재의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국회미래연구원은 오준호 전문 논픽션 작가와 함께 2018년에 수행한 연구를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중서적으로 구성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연구 결과 보고서의 취지와 핵심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논리를 재구성하고 근거를 보완해 방대한 연구 결과를 한 권의 책으로 압축하였다.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미래 예측을 위해 필요한 질문을 제시하였다. 각 분야별로 미래 모습에 영향을 줄 핵심 동인을 다섯 개씩 선정하였고, 동인들 각각에 관련된 미래 질문을 제시하면서 왜 그 동인이 특별히 중요한지 설명하였다. 제2부에서는 각 분야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가능 미래들 중 부정적 계기들이 축적되어 발생하는 위험 미래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위험 미래를 중요하게 다룬 것은 암울성 자체를 강조하기 보다는 그러한 미래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사전에 대처하기 힘든 돌발변수와 그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도 제시하였다. 그와 더불어 현재의 변화가 필요한 각 분야별 주요 정책을 한 가지씩 다루어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제3부에서는 우리사회가 나아가야하는 바람직한 미래라 볼 수 있는 선호 미래를 제시한다.

장기 미래 예측 연구를 수행하면서, 보완해야 할 과제도 많이 남았다. 과학적인 미래 예측을 위해 연구 방법론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해야하고, 다양한 분야 전문성을 가진 외부 연구팀과의 협력, 정책 방향 제시와 함께 그러한 방향이 실질적인 정책 수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의제를 구체화 하는 등의 일이다. 앞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장기 미래 예측을 주기적으로 수행해가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이 책을 통해 장기 미래 예측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미래 연구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미래의 직업전망

허종호, 유재광

국회미래연구원 출범 직후 장기 미래 예측과 같은 대규모 연구를 중심으로 과제가 수행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10~20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다소 무겁지 않은 소재를 다뤄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마침 한 자문위원이 '미래의 직업'을 제안하였다. 모든 젊은이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놓고 고민을 하고 있으며, 한번 선택한 직업을 바꾸기 위해서는 오랜 준비 기간, 숙련 기간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래를 철저히 염두에 두고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기획을 추진하였고, 젊은이들이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어떤 자질을 준비하고 갖춰 나가야 하는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단행본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제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었다. 직업의 미래는 더욱 급변하고 있다. 인공지능, 바이오, 나노 등 과학기술이 초융합을 거듭하며 전례없는 세상으로 향하고 있다. 그에 따라 어떤 직업은 사라지게 되고, 또 어떤 직업은 질적으로 달라지거나 새롭게 나타날 것이다. 쉽지는 않지만 미래 직업과 일자리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은 미래연구가 기여할 수 있는 지점이다.

본 기획에 있어 가장 큰 고민은 집필진의 구성이었다. 전문 분야별 미래연구자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여 국민의 미래 인식을 높이는 것 또한 국회미래연구원의 중요한 미션이다. 따라서 학문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감각을 가진 산, 학, 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모와 초빙을 진행하고 기관 내외부 전문가의 선정 과정을 통해 10개의 기획과제를 선정하였고, 본 단행물에는 최종 7개의 직업이 실리게 되었다.

7개의 직업 분야로 선정된 직업은 출연연 과학자, 방송콘텐츠 제작자, 초중고 교수, 농업인, 의사, 판사 및 마케터이다. 이들 직업군은 모두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에 양적, 질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직업군들이다. 각 장은 7개의 직업군별로 기술되어 있다. 직업별로 변화를 일으킬 요인들을 찾아내고, 그에 따른 직업의 모습을 수요와 공급을 포함한 나름의 방법으로 예측하였다. 최종적으로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바뀔 직업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으로 내용은 구성된다.

직업별로 관통하는 규칙이나 공식을 찾을 수는 없었지만, 미래 직업의 불확실성은 증가하는 반면 이것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찾아낼 수 있었다. 예컨대 인간의 직업은 직업(job)보다는 직무(task)의 개념으로 활동 반경을 넓힐 수 있으며, 지금은 하나의 직업으로 보이나 미래 사회에서는 이 직업이 여러 가지로 세분화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래에 직업을 갖게 될 미래 세대가 막연한 불안감이 아닌 미래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는 미래 문해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본 단행물이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

주요행사

국회미래연구원 창립 1주년 기념 토론회('19.5.24)

국회미래연구원 창립 1주년을 맞아 국회 내외의 주요 인사가 참석하여 축사 및 격려와 '국회미래연구원의 연구성과와 향후과제'를 주제를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회미래연구원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의 플랫폼으로서 소명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패널 토론에서는 미래 문제와 현재 문제를 어떻게 구분하고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 분야별 전문가,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력 중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국회미래연구원 창립 1주년 국제학술세미나('19.9.3)

'2050년 세계 예측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정책'을 주제로 세계 각국의 미래 예측 연구 현황 및 사례에 대한 공유 및 토론을 수행하였다. 소피하우 영국 웨일즈 미래세대위원장을 비롯한 7개국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였으며, 국회미래연구원과 공동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향후 과학기술 발전, 경제 불평등, 기후 변화 등 지구촌이 당면한 문제를 함께 함께 연구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세계 각국 미래연구 기관과 공동연구를 위한 양해 각서(MoU) 체결('19.9.4)

창립 1주년 국제학술대회 참석 기관을 대상으로 향후 미래연구 공동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EU(유럽의회), 영국(미래세대위원회), 멕시코(Analitica Consutores), 인도(DY 파틸 국제대학교), 아프리카(경제혁신센터), 미국(미래예측 네트워크) 등 6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 공유, 인적교류, 세미나, 공동학술 대회 개최 등 미래연구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다.

국회미래연구원–기획재정부 “미래전략 컨퍼런스” 공동 주최(’19.9.20)

‘대한민국, 희망을 모아 새로운 미래로’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입법부 및 행정부 산하 미래연구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주요이슈와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과학기술의 급진적 변화, 인구구조 및 가족구조의 변화 등이 유발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논의되었다. 또한, 미래 대응을 위한 국가전략 도출에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국회미래연구원–연세대학교 GEEF x AEARU 2019 공동개최(’19.10.29~30)

대학교육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대학, 연구기관, 사회단체 등 전문가가 참석하여 미래 사회 대학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로 발제 및 토론을 실시하였다. 세션 패널로 참석한 국회미래연구원 성문주 부연구위원은 학부와 대학원의 커리큘럼을 설계하고 시행할 때 교과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생활, 공동체, 사회 그리고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국회미래연구원–EPTA(유럽의회 기술영향평가) 네트워크 가입(’19.10.10)

EPTA*는 1990년 설립된 유럽 각국의 기술영향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관련 법령 제정 및 정책 추진을 위해 유럽의회에 의견 개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입하게 되었으며, 향후 과기정통부, 대학 및 각 연구기관에서 수행 중인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연구 결과를 국제협력 네트워크에 소개하는 등 관련 연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EPTA(European Parliamentary Technology Assessment)

미래 세미나(금요 브라운백) 개최

매주 금요일 국내외 미래연구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국회 내외부 구성원들과 미래 연구 현황 및 사례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 2019년은 총 43회의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18년 수행한 13대 분야 미래 예측 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 교수, 연구자 등 미래연구 관련 저명한 학자들의 미래 연구 방법론 소개, 미래 이슈와 현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제로 구성되었다.

〈 2019년도 미래 세미나(금요 브라운백) 개최 현황 〉

회차	일시	주제	발제자
1	19.01.04	개인과 집단	조성봉 교수 (숭실대학교)
2	19.01.11	기후변화의 미래와 정책적 시사점	전의찬 교수 (세종대학교)
3	19.01.18	인간의 경제학	이준구 교수 (서울대학교)
4	19.01.25	부동산시장과 보유세 정책: 회고와 과제	이선화 연구위원 (국회미래연구원)
5	19.02.01	유전자 가위와 우리의 미래	송기원 교수 (연세대학교)
6	19.02.08	미래사회와 교육패러다임의 전환	이민경 교수 (대구대학교)
7	19.02.15	한반도의 미래 공론조사 결과와 함의	이채정 부연구위원 (국회미래연구원)
8	19.02.22	정책미래에 대한 국민선호도 조사	정영훈 연구위원 (국회미래연구원)
9	19.03.08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 (에너지 · 자원 분야)	양혜영 선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0	19.03.15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 (정주여건 분야)	임지영 박사 (국토연구원)
11	19.03.22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 (우주분야)	김두환 교수 (인하대학교)
12	19.03.29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 (BT분야)	오문주 상무 (바이오코아(주))
13	19.04.05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 (IT분야)	윤기영 대표 (FnS컨설팅)
14	19.04.12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 (북한분야)	김명철 박사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15	19.04.19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 (국제정치분야)	김태형 교수 (숭실대학교)

회차	일시	주제	발제자
16	19.04.26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 (정치행정분야)	이한수 교수 (아주대학교)
17	19.05.03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 (인구사회분야)	최항섭 교수 (국민대학교)
18	19.05.10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 (휴먼분야)	이삼열 교수 (연세대학교)
19	19.05.17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 (식량수자원분야)	조만석 책임연구원 (국토연구원)
20	19.05.31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 (경제분야)	최창옥 교수 (성균관대학교)
21	19.06.14	교육혁명	이주호 교수 (KDI국제정책대학원) Liesbet Steer (교육위원회디렉터)
22	19.06.21	Governance Foresight: Then, Now, Maybe	Jim Dator 교수 (하와이미래학연구소)
23	19.06.28	Future Technologies and Implications for Government Actions	Jerome C.Glenn (밀레니엄 프로젝트)
24	19.07.05	왜 합의가 안 되는가?: BATNA를 알아야	박 진 원장 (국회미래연구원)
25	19.07.12	그림으로 읽는 세계화의 역사와 미래	송병건 교수 (성균관대학교)
26	19.07.19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스타트업의 역할	강영재 대표 (KSP 매니징파트너)
27	19.07.26	세계적 흐름으로 본 한국교육의 이슈와 전망	김이경 교수 (중앙대학교)
28	19.08.02	전환전 뉴딜	유종일 원장 (KDI국제정책대학원)
29	19.08.09	미중갈등의 본질과 전망	강동수 박사 (한국개발연구원)
30	19.08.23	우리나라의 비전과 전략: 새로운 질문과 아젠다	우천식 박사 (한국개발연구원)
31	19.08.30	사진의 모험: 미래는 사진의 세상	조세현 작가 (ICON STUDIO)
32	19.09.06	최근 한일갈등과 북일관계	이기태 연구위원 (통일연구원)
33	19.09.27	인구구조로 바라보는 중국사회의 미래	박정동 교수 (인천대학교)

미래 세미나(금요 브라운백) 개최

회차	일시	주제	발제자
34	19.10.08	미래환경변화의 baseline: 기후, 오염, 분쟁	김은아 부연구위원 (국회미래연구원)
35	19.10.11	오바마 연합의 재건은 가능한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전망	하상응 교수 (서강대학교)
36	19.10.18	국제이주와 글로벌 거버넌스 : 개발, 안보 그리고 국제협력	이병하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37	19.11.01	미중 전략 경쟁과 세계화	김용신 교수 (세종대학교)
38	19.11.08	인구 감소에 대응한 국토정책 방향	민성희 연구위원 (국토연구원)
39	19.11.15	화학의 미래: 협업, 융합, 그리고 미래	조현용 상무이사 (바이오네틱스)
40	19.11.22	미세플라스틱: 신종 오염 우려물질	심원준 소장 (한국해양과학기술연구소)
41	19.11.29	우라나라 혁신체제의 미래를 묻다 : 창의적 인재의 역할을 중심으로	여영준 부연구위원 (국회미래연구원)
42	19.12.06	통근시간과 삶의 질: 미래 교통정책에 대한 방향	장재민 수석연구원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43	19.12.13	과학적 증거기반의 입법정책수립 :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중심으로	이유봉 연구위원 (법제연구원)
44	19.12.20	미래의 정책결정방식: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황성수 교수 (영남대학교)

미래 좌담회 개최

우리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현상을 미래연구의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토론과 합의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좌담회는 안락사, 블라인드 채용, 자사고 존폐 등 특정 주제에 대한 찬반의 입장을 가진 두 명의 전문가나 특수한 의견을 가진 사람을 선정해 대담형식으로 진행되는 '합의형성성 좌담회'와 잠재적 갈등은 내포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미래연구의 추진에 있어 기반이 되는 중요한 분야에 대한 관련 전문가 초청 '전문가 좌담회'로 구성되었다.

〈 2019년도 미래 좌담회 개최 현황 〉

회차	일시	주제	패널 및 참석자
1	19.03.22	안락사, 확대할 필요가 있는가?	신동일(한경대학교) 정학섭(전북대학교) 박진(국회미래연구원) 이수진(국회미래연구원)
2	19.05.17	2050년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서는 미래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정치 · 사회적인 안정도필요	제롬 글램(밀레니엄 프로젝트) 박영숙(밀레니엄프로젝트) 박진(국회미래연구원) 김병수(국회미래연구원)
3	19.06.05	블라인드 채용, 이대로 괜찮은가?	박수선(갈등해결&평화센터) 강순희(경기대학교) 장재윤(서강대학교) 박진(국회미래연구원) 김가연(국회미래연구원)
4	19.09.04	기후변화 대응은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하며, 각 국가 상황에 맞는 시장 매커니즘 필요	존 크리스텐슨 (UNEP-DTU Partnership) 박진(국회미래연구원) 김은아(국회미래연구원)
5	19.09.30	자사고(외고) 존폐 관련 논의	은재호(한국행정연구원) 강명숙(배재대학교) 이성호(중앙대학교) 박진(국회미래연구원) 성문주(국회미래연구원) 김가연(국회미래연구원)
6	19.09.26	생산성 제고와 연금제도의 개혁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고, 새로운 경제적 협력관계를 통해 국제경제 질서에 대응해야	랜들 존스 박진(국회미래연구원) 박성준(국회미래연구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연구성과 홍보

[기고문(미래기고, 미래생각)]

미래 예측과 대응 전략과 관련하여 정계, 학계,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피니언 리더가 제시하는 의견을 외부 전문가 기고문의 형태로 소개하는 '미래기고'와 매주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진이 주축이 되어 뉴시스와 공동기획을 통해 게재하는 '미래생각'을 통한 대국민 소통을 수행하였다.

〈 2019년도 미래기고 현황 〉

회차	게재일	제목	기고자
1	19.01.07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손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현제(자유한국당 전(前)정책위의장)
2	19.01.15	국회는 새 시대 담을 새 그릇 준비해야	이혜훈(바른미래당 국회의원)
3	19.01.28	지속 가능한 고등교육의 미래와 대학의 역할	이찬열(바른미래당 국회의원)
4	19.02.07	국회, 지난 70년 총정리가 필요하다.	이정현(새누리당 당대표)
5	19.02.19	한국 정치가 마주하고 있는 변화와 미래	심상정(정의당 국회의원)
6	19.03.06	한국사회의 현재와 4차 산업혁명의 미래사회	유민봉(자유한국당 국회의원)
7	19.03.18	북핵 해법, '뉴딜'로 가야	원유철(現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
8	19.03.26	국회 개혁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	장병완(現민주평화당 원내대표)
9	19.04.15	도시의 노후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정유섭(現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
10	19.04.26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미래, 인재육성에 달렸다.	손금주(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1	19.05.16	국회미래연구원 춘계 학술대회를 보며	곽재원(現가천대학교 교수)
12	19.06.05	미래를 위하여 '제대로' 확인해야 할 현재	송하중(경희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13	19.06.25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	최진호(아주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 2019년도 미래생각 기고 현황 〉

회차	게재일	제목	기고자
1	19.01.03	프랑스 futuribles 컨퍼런스 참관기	허종호
2	19.01.10	고달픈 시간빈곤의 나라	이채정
3	19.01.18	우리는 또 다른 기적을 볼 수 있는가?	이용상
4	19.01.24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	정훈
5	19.02.01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의 길을 묻는다.	이선화
6	19.02.14	플랫폼 벤처 붐을 기대한다.	김홍범
7	19.02.21	'한 · 일관계 위기' 피로증: 미래지향적 한 · 일 관계를 위한 제언	유재광
8	19.02.26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하다. –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 II」 참관기	김유빈
9	19.03.07	인간감소사회의 사회디자인전략과 모럴	정영훈
10	19.03.14	세계 최초 미래세대 위원장을 아시나요?	박성원
11	19.03.21	균형발전, 사람 중심의 지역발전이 되어야	민보경
12	19.03.28	프랑스가 내다보는 2050년 : Vigie report 2018 소개	허종호
13	19.04.04	운과 기도와 전문가를 넘어서	이채정
14	19.04.11	수소경제, 우리는 준비되었는가?	정훈
15	19.04.18	우울한 미래예측, 그리 우울하지만은 않은 역사	이선화
16	19.04.25	플라톤의 국가	박상훈
17	19.05.02	상상하는 인간의 탄생	박성원
18	19.05.23	협상과 환상: 북 · 미 핵 협상의 우울한 미래	유재광
19	19.06.05	숫자에 의한 통치 : 계량화의 환상	정영훈
20	19.06.20	시민참여 기반의 미래 연구를 확대하자	김유빈
21	19.07.03	우리와 그들은 같이 살 수 있을까	민보경
22	19.07.11	정신질환자, 치료의 연속성이 중요하다.	허종호
23	19.07.17	복지국가는 조세와 복지의 양날개로 난다	이채정
24	19.07.25	지방분권, 왜? 어떻게?	이선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연구성과 홍보

회차	게재일	제목	기고자
25	19.08.01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	박상훈
26	19.08.08	〈2050년의 주인공들을 위한 교육 : 무엇이 변해야 하는가〉	성문주
27	19.08.14	인구구조 변동이 초래할 미래 이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박기태
28	19.08.22	한일 무역갈등과 무역의 무기화	박성준
29	19.08.27	환경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현재와 미래	김은아
30	19.09.06	불확실성이 큰 미래의 대한민국 혁신체제, 창조적 학습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여영준
31	19.09.11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수월성 교육 제안	조인영
32	19.09.19	위험, 급변, 불평등 시대에 대응하는 방법	박성원
33	19.09.26	미래지향적 대규모 R&D 사업 기획	김홍범
34	19.10.02	동북아 복합 갈등의 등장과 불안정한 미래	유재광
35	19.10.10	주 52시간제를 위한 변명과 근로시간 규제 완화의 조건	정영훈
36	19.10.17	정치 · 문화 · 일상, 열린 공간으로서의 광장(廣場)	민보경
37	19.10.24	이머징 이슈 브레인스토밍 세미나 참가기	허종호
38	19.10.31	미래연구 발전을 위한 제언	김유빈
39	19.11.07	재분배의 역설의 역설	이채정
40	19.11.14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보유세 개편방향 제언	이선화
41	19.11.21	마키아벨리의 군주	박상훈
42	19.11.28	우리와 함께하는 아이들도 돌봄이 필요하다	박기태
43	19.12.05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실패에 대한 관점전환이 필요한 때	성문주
44	19.12.12	암호화폐는 미래의 화폐가 될 수 있을까	박성준
45	19.12.19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환경협력의 오래된 미래	김은아
46	19.12.26	전환을 위한 변곡점에 진입함을 알린 2019년, 공동의 노력과 협치로 슬기롭게 새해를 맞이해야	여영준

[미래엽서]

주요 연구성과 및 계획을 엽서의 형태로 제작하여 내외부 정책고객에게 발송하였다. 총 10회에 걸쳐 국회미래연구원 다년도 연구계획안, 미래정책방향 대국민 설문조사, 2050 미래예측과 핵심개혁과제, 한국인의 미래인식 및 선호가치 조사, 국제학술세미나 시사점과 요약, 미래정책에 대한 세대별 선호조사 등이 포함되었다.

회차	주제
제1호	빅데이터가 말하는 미래의 핵심이슈는 '사람(Human)'
제2호	국회미래연구원의 미래 연구 프로세스와 추진체계
제3호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65개 이슈
제4호	국회미래연구원의 '한반도 미래 공론조사' 주요 결과
제5호	국회미래연구원 다년도 연구계획안
제6호	국회미래연구원의 미래정책방향 대국민 설문조사
제7호	국회미래연구원의 13대 분야 2050 미래예측과 핵심개혁 과제
제8호	한국인의 미래인식 및 선호가치 조사
제9호	제1회 국제학술세미나 〈2050년 세계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정책〉에서 무엇을 배웠나?
제10호	정책선호, 세대에 따라 어떻게 다를까?

[미래에서 보내는 편지(뉴스레터) 발송]

연구원의 연구성과, 기고문, 주요 소식 등을 뉴스레터로 제작하여 매주 금요일 6,500여명의 정책고객에게 발송하였다. 2019년은 총 39편의 뉴스레터를 제작하여 발송 완료하였다.

2018년 연구과제 목록

미래영향 환경변수 및 시나리오 도출 연구

보고서명 :

- 미래영향 환경변수 및 시나리오 도출 연구 [연구방법과 주요결론] [13대 분야별 연구결과]

저자 :

김유빈 편

국민선호미래 연구

보고서명 :

국민선호미래 연구

저자 :

박성원, 김유빈, 정영훈, 민보경, 송지은 외

미래결정 정책 연구

보고서명 :

미래결정 정책의제 연구

저자 :

민보경, 김홍범, 이채정, 허종호, 강지희

북한 및 통일 한반도의 미래 연구

보고서명 :

북한 및 통일 한반도의 미래 연구

저자 :

유재광, 정영훈, 이채정, 김현, 우병원, 강지희

연구역량 강화사업

보고서명 :

연구역량 강화사업

저자 :

김홍범 편

단행본

제명 :

미래의 직업전망

저자 :

허종호, 유재광

2020년 연구과제 목록

기본연구사업부문 : 14개 연구과제

사업명	연구과제	책임자
1.삶의 질 (5개)	1-1-1. 기후변화 미래사회영향 대응 전략수립 기반 연구	김은아
	1-1-2. 대한민국 행복지도 2.0 연구	민보경
	1-1-3.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연구	민보경
	1-1-4. 사회정책 재원조달체계 개편방안 연구	이채정
	1-1-5. 미래 인구변동을 고려한 융합적 인구추계	허종호
2.혁신 성장 (4개)	1-2-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도시전략	김은아
	1-2-2.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진단 및 전략 연구	성문주
	1-2-3.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성장, 분배 효과 분석 및 정책실험 연구	여영준
	1-2-4.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동을 고려한 미래평생학습 지원체계 구축 연구	박기태
3.거버넌스 (5개)	1-3-1. 가상화폐의 파급효과와 정책 대안 연구	박성준
	1-3-2. 미래대비 정책의제 연구 : 초고령사회의 재정분권	박성준
	1-3-3. 중국의 미래 : 중국 CPC(Communist Party of China)의 미래연구	유재광
	1-3-4. 한국의 국제기구(IGOs) 거버넌스 연구	유재광
	1-3-5. 한 · 중 · 일 복합 갈등의 미래	유재광

중점연구사업부문 : 21개 연구과제

사업명	연구과제	책임자
1.미래 영향 예측 (5개)	2-1-1. 이머징 및 돌발이슈 분석 연구	김유빈
	2-1-2. 통합적 생태계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발전과 사회변화 예측	박성원
	2-1-3. 기술영향평가 개선방안 연구	김홍범
	2-1-4. 성평등 이슈와 예측 기반 미래정책방향 도출 연구	김유빈
	2-1-5. 사스부터 코로나19까지 세계적 감염병 이후 미래사회 예측	박성원
2.정책평가 (4개)	2-2-1. 중장기계획 평가 방안 연구	이채정
	2-2-2.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연구 : 정주여건	김은아
	2-2-3.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연구 : 고령사회 대응	성문주
	2-2-4.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연구 : 과학기술 부문	여영준

사업명	연구과제	책임자
3.국회 역량 강화 (4개)	2-3-1. 국회의 미래 : 국회의 기능과 역할,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박상훈
	2-3-2. 국회의원의 미래 : 신뢰받는 의원이 되려면 어떤 말과 행위 규범을 준수해야 할까?	박상훈
	2-3-3. 정치의 미래 : 양극화된 정치,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박상훈
	2-3-4. 미래협치 실현을 위한 정당정책연구소 공동연구	정영훈
4.장기 발전 전략 제도화 (4개)	2-4-1. 한국형 권력구조에 대응한 정부조직개편	조인영
	2-4-2. 분권형 재정관계 재정립을 위한 제도 개혁방안 : 정부 의무 지출을 중심으로	이선화
	2-4-3.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정책 거버넌스 제도화 방안 연구	여영준
	2-4-4. 사회정책 전달체계 개혁 방안 연구	이채정
5.불평등 (4개)	2-5-1. 한국의 신불평등 연구	박기태
	2-5-2. 경제적 불평등의 정치적 결과 : 정치참여를 중심으로	조인영
	2-5-3.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의 특성 및 조세정책의 과제	이선화
	2-5-4. 한국인 남녀의 건강격차 연구 : 생애주기적 접근	허종호

조사연구사업부문 : 3개 연구과제

사업명	연구과제	책임자
1.선호 조사 (2개)	3-1-1. 2020 한국인의 미래선호가치 연구 : 미래세대 중심으로	민보경
	3-1-2. 선호미래 실현을 위한 미래정책과 국민의 선택 연구	정영훈
2.행복 조사 (1개)	3-2-1. 한국인의 행복조사 연구(예비조사)	허종호

연구기반사업부문 : 8개 과제

사업명	추진내용	담당부서
1.홍보 사업	4-1-1. 홈페이지 고도화 및 콘텐츠 관리	연구 지원실
	4-1-2. 대외 홍보 강화(보도자료, 뉴스레터, 미래엽서, 창립행사, 연구성과발표회 등)	
2.역량 강화	4-2-1. 자체역량 강화(연구역량강화 교육, 브라운백, 자체 세미나)	
	4-2-2. 학술활동 지원(워킹 페이퍼 작성, 국내외 학회 발표 지원 등)	
3.대외 협력	4-3-1. 연구협력 강화(출연연, 시도연, 유럽기술영향평가 네트워크) 등 국내외 기관과 협력)	
	4-3-2. 학술행사 개최(2주년 국제학술, 학회 및 유관기관 공동 학술회 등)	
4.연구 기획	4-4-1. 연구기획 및 관리(자문회의, 연구관련 위원회, 보고서 평가 등)	
	4-4-2. 연구과제 발굴 및 신규과제 기획	